

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세미나

디지털 경제, 왜 경쟁력을 잃고 있는가?

- 위기의 진단과 산업별 해법 -

이화여대 채상미 교수

목차

- 정책 제안 배경
- 디지털 위기 진단
- 산업별 사례 및 정책 해법
- 종합 정책 제안
- 기대 효과
- 참고자료

정책 제안 배경

- 대한민국은 ICT 인프라 세계 상위권이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은 하락세
- 규제 과잉, 제도 미비, 인재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심화
- 금융·의료·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저하
- 1. 글로벌 지수 및 산업 지표에서의 하락·정체 신호
 - IMD 디지털 경쟁력 세부지표 하락
 - 2023년 IMD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순위(6위)는 유지했지만, 세부적으로 기술 부문하위 평가 항목(규제체계, 자본, 기술체계 등)이 2022년보다 하락
 - 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 고급인력 수준은 국제 비교에서 여전히 낮으며, 국제 경험을 가진 고위 관리직 채용(51위), 디지털 기술 활용도(48위), 여성 연구자(55위) 등에서 미흡한 평가
 - 법, 금융, 기술 환경 인프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
- 2. 산업별 경쟁력 약화 및 성장 정체
- 반도체·디지털 산업의 경쟁 심화
 -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은 AI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고, 중국은 DRAM·메모리 반도체에서 빠르게 추격 중
 - 예를 들어, 중국 창신메모리(CXMT)가 DDR5 D램을 독자 개발하며, 한국의 기술 우위가 흔들리고 있음
 - 전기차, 가전, 스마트폰 등 기존 강점 산업도 성장 정체와 시장 포화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
- 데이터센터 인프라 부족
 - 데이터센터 인프라 부족과 각종 규제 문제로 인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소외되고 있음
 - 이로 인해 AI, 클라우드,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산업 발전 기반이 약화되고,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
3. 기업 및 시장의 위축 신호

- 국내 대표 ICT 기업 가치 하락
 - 2024년 한 해 동안 카카오, 네이버, 쿠팡 등 주요 테크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 증발
 - KOSPI는 6개월 연속 하락(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),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도 -0.87%로 해외 주식(26.52%)과 큰 격차를 보임
- 창업·혁신 생태계의 위축
 -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(GEM) 2023/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역내 창업기회/인식에서 최하위권(이란 다음)으로, 혁신적 창업이 위축되고 있음
 - 규제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기업들이 단기 성과 위주로 움직이고 혁신적 도전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됨

4. 규제 및 정책 환경의 한계

- 과도한 규제와 '포지티브 규제'의 부작용
 - 한국의 규제 체계(포지티브 규제+그림자 규제)는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진입을 막고 있음
 - OECD 상품시장 규제(PMR) 15개 세부지표 중 3개만 OECD 최고수준, 7개는 평균 이하, 5개는 크게 뒤쳐진 상태로,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

5. 대외 환경 및 정치·사회적 불확실성

- 정치적 혼란과 글로벌 환경 악화
 - 2025년 개헌사태 등 정치적 불안, 글로벌 경기 침체, 미중 기술 패권 경쟁, 트럼프 2.0 등 대외 리스크가 겹치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
 -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.1%로 하향 조정, 2025년은 2.0%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

디지털 위기 진단

- 규제 환경: 선제적 규제 → 신산업 위축 (OECD 디지털정부 지수 정체)
- 제도 이행력: 샌드박스 → 제도화 미비 (제도화율 18%)
- 인재/데이터: 전문인력 부족, 개방형 데이터 부족 (개방율 하위권)

산업별 사례: 디지털 금융

- 문제점:
 - 빅테크-금융사 규제 불균형
 - 마이데이터, 디지털자산 제도 미흡
- 정책 해법:
 1. 동일기능 동일규제 도입
 2. 디지털 자산 법제화
 3. 데이터 융합 샌드박스 확대

산업별 사례: 디지털 의료

- 문제점:
 - 원격의료 제도화 미비
 - AI 진단기기 승인 지연
- 정책 해법:
 1. 원격의료 상시 허용
 2. 의료 AI 인증체계 개선
 3.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

산업별 사례: 디지털 제조

- 문제점:
 - 중소 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체
 - 공정데이터 비표준
- 정책 해법:
 1. 데이터 표준 프로토콜
 2. AI 스마트팩토리 지원
 3. DX 지원센터 설립

종합 정책 제안

- 규제 혁신: 네거티브 규제 확대, 기능 중심 규제
- 생태계 조성: 민간 주도 클러스터, 공공데이터 개방
- 인재 양성: 석박사 트랙 확대, 리스킬링 강화
- 실증 확대: 제도화 루프 구축

정책 기대 효과

- 기술적: AI·데이터 상용화
- 산업적: 중소기업 경쟁력, 플랫폼 진입
- 경제적: 성장률 제고, 일자리 창출
- 사회적: 의료·금융·제조 서비스 고도화

참고자료

- 산업부 『K-스마트제조 전략』 (2022)
- 보건복지부 『디지털 헬스케어 로드맵』 (2023)
- 금융위 『디지털금융 종합대책』 (2023)
-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(2022)
- McKinsey ,Asia Digital 2030 (2023)
- KoCham, 한국의 디지털 전환 현주소와 정책방향 (2024)
- ITIF, From Fast Follower to Innovation Leader: Restructuring South Korea's Technology Regulation, (2025)

저출산과 일·가정 양립

김준형

2025. 04. 21

넥서스포럼 세미나

합계출산율 0.7

-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나
 - 인구가 끝없이 줄어들면 망하지 않을까
- 망하는 것은 아니다
 - 현재의 출산율이 변함없이 유지될 거라는 근거없는 예측
 - 한국보다 인구 작은 강대국도 많음
- 다만
-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노동생산성, 산업구조 등이 재편될 것
- 큰 변화의 시기
-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해질 수 있음

저출산에 대응해야 할 이유

- 지금 아무리 대응해도 인구감소를 뒤집을 수는 없다
- 그래도 정부가 나서 출산율을 늘려야 할 이유는?
- 1. 개인의 행복 – 나라에서 나서야
 - 돈, 시간이 부족해 출산 포기 → 불행한 나라
 - 자원 부족을 해결해 출산 → 행복 증진
- 2.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공동체에 필요하다
 - 총 인구, 노동력 → 경제, 국방
 - 젊은 인구 → 기술, 학문, 문화적 혁신
 - 인구는 공공재. 위에 나타나는 이득은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음.
 - 따라서 공동체가 비용을 분담해야

나라에서 한 노력

- 2002년 합계출산율 1.17, 저출산문제 공론화, 2003년부터 정책적 노력 시작
- 2005년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정, 저출산·고령사회 위원회 출범, 5개년 목표
- 제1차 기본계획 ('06—'10): 저소득층 대상 보육비, 교육비 지원확대 등. 체감효과 낮음.
- 제2차 기본계획 ('11—'15): 일하는 가정 대상으로 일·가정 양립 정책 추진
- 제3차 기본계획 ('16—'20):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, 일·가정 양립 및 남녀 평등한 노동·양육여건 확립
- 제4차 기본계획 ('21—'25): 영아수당 신설, (아버지) 육아휴직 확대, 다자녀지원은 2자녀로 확대

현금성 지원?

- 지금 하는 지원은 유지해야
- 그렇지만 지원을 더 늘린다고 효과가 클 것이라는 보장은 없음
 - Laroque&Salanie (2013): 프랑스 GDP 0.3% 지원할 경우 출생률 3.3%포인트 증가
 - 지자체 출산지원예산에서 출산지원금이 43.6% (박소은, 2024)
 - 박혜림 (2024), 박소은 (2024): 비현금성 지원 효과 있음, 현금성 지원의 효과는 확신할 수 없음
- 자녀 출산은 부모의 생애를 전부 바꾸는 일
 - 비용, 편익 모두 생애에 걸쳐서 일어남
 - 출산시기만 지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님
 - 부모, 자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양육, 교육이 가능해야

집값, 교육비, 수도권집중화?

- 집값과 출산율의 관계
 - 주택 보유자 → 양의 영향
 - 주택 미보유자 → 음의 영향
- 주택시장 관리는 쉽지 않음
 - 수많은 정권의 무덤
- 교육 개혁
 -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권의 무덤
 - 차라리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올지도
 - 4세고시, 7세고시는 피해야
- 수도권집중화
- 장기적인 계획 필요

일·가정 양립

- 이미 일찍부터 (최소 2차 계획때부터)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되었음
- 노동력이 부족해질 사회—남녀 모두 고부가가치 노동을 해야
- 성별 무관하게 생산성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노동해야
- 양육 부담 때문에 노동 못하면 국가적 손해
- 개인의 행복 및 가정 형성에 핵심적 요소
- 여성이 일을 하지 않는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음
- 세계적인 추세는?

출산율과 여성노동참여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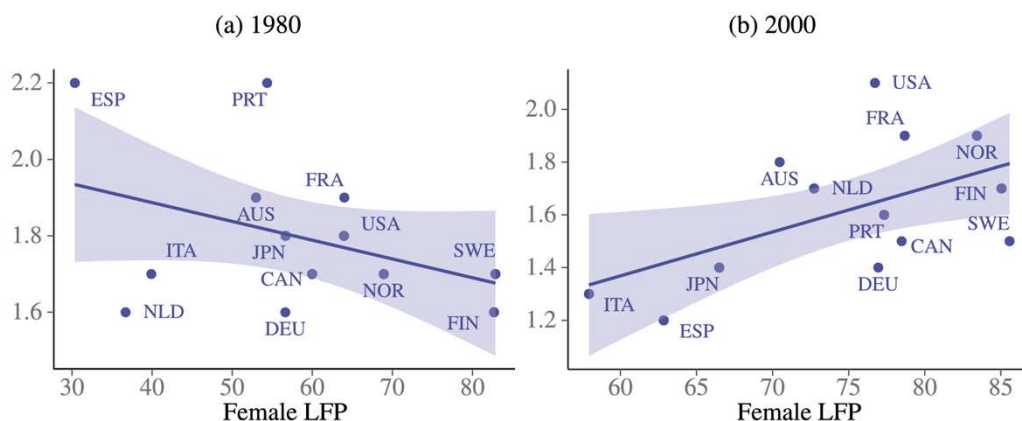


FIGURE 12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cross OECD economies.

Doepke, Matthias, Anne Hannusch, Fabian Kindermann, and Michèle Tertilt. "The economics of fertility: A new era." In *Handbook of the Economics of the Family*, vol. 1, no. 1, pp. 151-254. North-Holland, 2023.

출산율과 여성교육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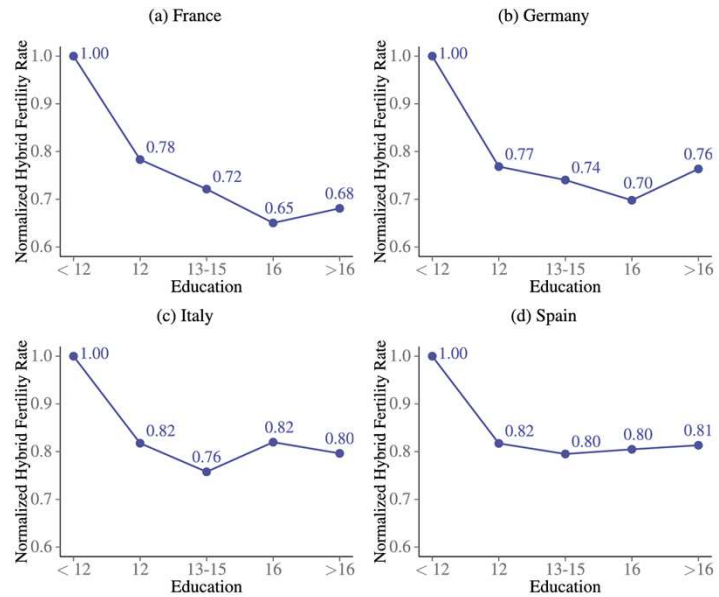


FIGURE 15 Normalized hybrid fertility by women's education: evidence from Europe.

Doepke, Matthias, Anne Hannusch, Fabian Kindermann, and Michèle Tertilt. "The economics of fertility: A new era." In *Handbook of the Economics of the Family*, vol. 1, no. 1, pp. 151-254. North-Holland, 2023.

한국의 상황은?

- 출산휴가, 양육휴가 짧고 사용률 낮음
 - 2022년 기준 한국의 유급 출산휴가는 12.9주(90일)
 - OECD 국가 평균: 18.5주
 - 2022년 사용율 30%, OECD 국가중 뒤에서 두번째
- 고등교육을 받은 직업군에서조차 정책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
- 결혼부터 포기
 - 결혼비용인지 양육비용인지는 불분명
 - 둘 다일 가능성이 큼

미혼율과 여성교육 수준 (한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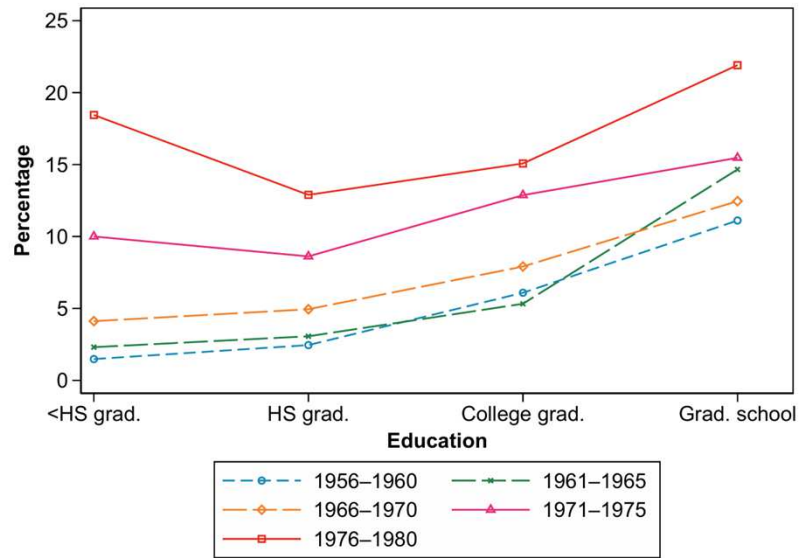


Fig. 4 Percentage of women never married at ages 40–44 by women's education. Data are from the 2000–2020 census 1% sample. *College graduate* refers to a four-year college graduate.

Hwang, Jisoo. "Later, fewer, none?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." *Demography* 60, no. 2 (2023): 563-582.

무자녀율과 여성교육 수준 (한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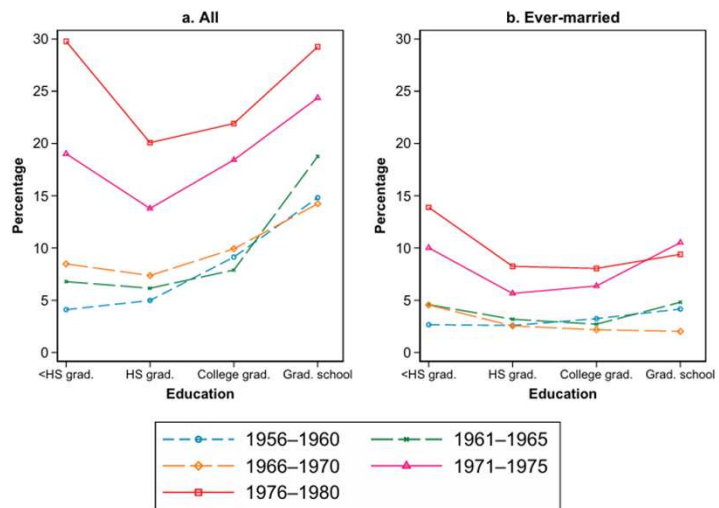


Fig. 5 Percentage of women childless at ages 40–44 by women's education. Data are from the 2000–2020 census 1% sample. *College graduate* refers to a four-year college graduate.

Hwang, Jisoo. "Later, fewer, none?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." *Demography* 60, no. 2 (2023): 563-582.

출산휴가: 기업에게 부담?

- 스웨덴: 부담이 있으나 대체 인력이 있으면 부담이 경감

Ginja, Rita, Arizo Karimi, and Pengpeng Xiao. "Employer responses to family leave programs." *American Economic Journal: Applied Economics* 15, no. 1 (2023): 107-135.

- 덴마크: 자체 인력으로 대응이 가능하면 부담이 없으나 불가능하면 비용 발생

Brenøe, Anne Ardila, Serena Canaan, Nikolaj A. Harmon, and Heather N. Royer. "Is parental leave costly for firms and coworkers?." *Journal of Labor Economics* 42, no. 4 (2024): 1135-1174.

- 미국: 출산휴가 사용을 예측한 고용주에서 여성노동자를 기피할 수 있음

Thomas, Mallika. "The impact of mandated maternity leave policies on the gender gap in promotions: Examining the role of employer-based discrimination." *Available at SSRN 3729663* (2020).

출산휴가: 기업에게 부담?

- 한국?
- 2024. 윤석열정부 중소기업에 세제혜택 검토
- 2025.02 육아지원 3법, 기업에 재정 지원
- 2025.04.20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발간:
- “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”
- “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,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”

결론

- 일·가정 양립은 일찍부터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됨
- 여러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일·가정 양립이 실현되지 못함
- 지금까지 정책은 노동자 입장에서 일·가정 양립 정책 추진
- 기업 입장에서 일·가정 양립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유인책은 올해 들어서야 도입되기 시작
- 지속적인 정책 추진 및 평가가 필요

더 알아보기

- 이철희 “일할 사람이 사라진다”
- Hwang, Jisoo “Later, Fewer, None? Recent Trends in Cohort Fertility in South Korea”
- Doepke, Matthias, Anne Hannusch, Fabian Kindermann, and Michèle Tertilt. "The economics of fertility: A new era." In *Handbook of the Economics of the Family*, vol. 1, no. 1, pp. 151-254. North-Holland, 2023.